

미-베트남관계 정상화전망과 대응책

홍규덕*

목 차

- | | |
|----------------------|-----------------------------------|
| I. 서론 | IV. 베트남의 입장: 무역제재조치의
해제가 주는 의미 |
| II. 미국의 이해와 딜레마 | V. 결론: 한국의 대응책 |
| 1. 미국의 이해 2. 미국의 딜레마 | |
| III. 미국의 예상태도와 전망 | |

I. 서론

미국의 대베트남정책에 대한 변화는 이미 부시행정부 말기부터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어느정도의 선에서 무역제재조치를 철회하고 또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시대통령은 1991년 10월 대베트남 관계개선을 위한 4단계 Road Map을 발표했고, 퇴임 직전인 1992년 12월 14일에는 자국민들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직접적인 거래의 집행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베트남기업들과의 상업적인 계약체결도 허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는 1964년 이후 당시 북베트남 공산정권을 상대로 진행되어오다 1975년 이후부터는 베트남전역을 상대로 적용되어 온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시는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자신의 취임연설 당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무역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고 말았다. 걸프전의 승리 직후 그는 이제 미국은 유일초강대국으로서 냉전의 승리를 이끌었고 또 베트남신드롬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의 상처는 걸프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민주당의 젊은 클린턴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부시의 입장에서는 로스 페로라는 독립후보가 베트남전의 실종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의있는 처리자세를 쟁점으로 들고나온 이상, 베트남과의 무역제재 해제라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결코 아니었다.

쟁점으로 들고 나온 이상, 베트남과의 무역제재 해제라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결코 아니었다.

결국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재제조치의 해제와 관계정상화라는 무거운 짐은 신행정부인 클린턴의 몫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1992년 12월 부시가 내린 결정에 따라 1993년 4월 27일 첫 번째 미국회사로 베트남-미국무역투자자문회사(The Vietnam America Trade & Investment Consulting Company)라는 컨설팅 회사가 하노이에서 문을 열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많은 회사들도 사무소 개소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¹⁾ 미국이 자국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사무소 개설을 허용한 조치는 분명히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클린턴행정부가 이문제를 얼마나 소신있게 해결해 나아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미국은 지난 1993년 4월 2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회 회의에서 베트남이 국제통화기금에 진 1억 4천만달러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베트남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얻어 국내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프랑스나 일본측안(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소련문서고에서 발굴된 미군 실종자처리에 관한 새로운 제보와 미국과 베트남간의 조기정상화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항의에 직면, 급기야는 입장변경을 유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로부터 게센 압력을 받은 미국 국무성은 미국이 6월 중순이나 7월초에 열릴 다음번 이사회까지는 입장을 바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²⁾ 그 후 미국의 실종자에 관한 상원특별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나 존 베시 대통령특사의 보고에 의해서도 소련에서 발견된 문서가 신빙성이 없음이 들어났고 베트남측의 실종자 확인에 대한 성의있는 후속조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프랑스나 일본의 의도를 저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결국 1993년 7월 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의 국제통화기금(IMF)에 진 부채를 갚도록 용자해주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³⁾ 따라서 국제금융대출기구들로부터 약 10억불의 원조가 베트남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학교시설 및 농업발전을 위한 용자부문에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⁴⁾ IMF는 현재 수억달러에 해당하는 용자를 계획하고 있고 세계은행 역시 3억 내지 3억 5천만달러 정도의 용자를 금년내 제공할 예정이다. 그 중 약 1억달러는 베트남 유일의 남북관통선인 1번 국도의 주요지점에 대한 보수를 위해

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7, 1993), p. 17.

2) Susumu Awanochara, "Not Yet, US Tells Vietna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3 May, 1993).

3) "On President Clinton's New Step on Vietnam," Press Release b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ermanent Mission to the U.N. No. 20, (July 5, 1993).

4) Ken Stier, "Getting the Aid to Vietnam Starte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5, 1993), p. 7.

사용될 계획이며 약 7천만달러 정도는 우기때마다 장마로 인한 피해로 수업이 불가능하고 또 교실부족으로 3부제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아시아개발은행도 금년말까지 약 2억 5천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관개시설의 확충과 홍수방지, 주요도로의 확장과 항만 확충 등의 용도에 쓰일 것이다.⁵⁾

최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에 참석했던 워렌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구엔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은 7월 27일 싱가포르에서 미-베트남관계개선을 위해 베트남전 종전이후 첫번째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미-베트남관계의 개선은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 실종미군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해명작업에 만족을 느낄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베트남측의 보다 성의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중인 17개 미국기업인 대표들과의 조찬에서 미국의 대(對)베트남 금수(禁輸)조치의 해제를 요청받고 미국기업인들이 실종자 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내를 갖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⁶⁾ 이러한 분위기때문에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1993년 9월에는 미국이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즉 미국이 매년 9월을 기점으로 1년씩 연장하는 베트남을 포함한 적성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가 해제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만약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어느정도의 선에서 해제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9월 14일 적성국들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다시 1년간 연장하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즉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에 대한 대베트남 원조 허용과는 별개로 미국의 금수조치는 유효하며 베트남의 미국실종자들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가 지켜질 때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미국 클린턴행정부가 갖는 이해와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를 어떻게 풀어 나아갈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베트남 금수조치의 해제가 갖는 의미를 베트남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향후 한국의 대응책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이해와 고민

먼저 무역제재조치를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것과 관련, 클린턴행정부가 갖는 중요한 이해와

5) *Ibid.*

6) 『세계일보』 (1993년 7월 28일), p. 4.

달레마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이해

첫째,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해는 미군 포로 및 실종자(POW/MIA)에 대한 의문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으로 베트남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으며 금수조치 해제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해왔다. 현재 보고된 2,264명의 실종자들의 행방과 생존포로들의 억류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위해 미상원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결성 1993년 1월 13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다.⁷⁾ 현재 미국정부는 연 1억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라오스나 베트남내를 수색, 전쟁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확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존 케리 상원특별위 위원장에 의하면 조사결과 예상과는 달리 약 100여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숫자만이 실제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으리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⁸⁾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6월 마지막 생존가능자들에 대한 확인이 끝날때까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보류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둘째,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많은 미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현지투자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기대보다 높으며 인구 7천만의 베트남시장이 갖는 잠재성과 전 동남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연안의 석유시추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현재 하루 2천톤을 생산하는 베트남과 러시아의 합작회사인 VietSovpetro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외에도 부족한 전력이나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관련 대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매우 높다.⁹⁾

따라서 미국이 더이상 프랑스나 일본의 대베트남 용자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클린턴 행정

7) United States Senate,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POW/MIA Affai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8) *Ibid.*, pp. 369-370.

9) 현재 호치민시는 건기에 전력부족으로 주 4회 정도 정전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500계획을 통해 북베트남의 호아빈(Hoa Binh)수력발전소로부터 1,500Km의 긴거리에 송전관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관리들의 부패가 나타나는 등 시초부터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Line of Controvers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4 February, 1993), p. 51. 현재 베트남은 전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투дук(Thu Duc)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가스터빈보일러를 구입했는데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때문에 프랑스제를 도입하고 있다. "Groping in the Dar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2 September, 1991), p. 42.

부의 결정은 미국의 기업이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며 완전한 무역제재조치의 해제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해제보다 선행 되었어야 미국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상공회의소 등 많은 기관에서 미국이 더이상 늦기전에 무역제재를 철회하고 베트남에 자국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⁰⁾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하에 당선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최근 1조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총체적 외교(Comprehensive Diplomacy)내지는 공정무역에 바탕을 둔 상업외교(Commercial Diplomacy)를 강조하는 클린턴 행정부가 제 3 세계에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과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독식을 좌시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미국기업들의 입장이다.

특히 프랑스는 미테랑대통령이 서방지도자로서는 최초로 1993년 2월 9일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으며 방문시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호혜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한 바 있다.¹¹⁾ 일본 역시 1992년 11월 6일 14년만에 베트남에 대한 약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상업차관을 재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자율 1%에 30년거치로, 관대한 상환조건의 일본상업차관은 주로 석유제품이나 철강산업제품들의 수입에 이용될 것이며 비록 일본제품수입을 조건화하지는 않았지만 하노이 주재 일본지사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그동안 일본의 대베트남원조는 1978년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침공을 한 데 대한 항의로 중단되었으며 베트남 역시 일본이 원조를 중단하자 1975년 남베트남의 사이공정권의 몰락 이후 축적된 약 1억 6천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1992년 11월 4일 8개의 일본 투자회사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약 2억 달러 상당의 용자를 얻어 빚을 갚음으로써 새로운 일본의 상업차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¹²⁾

일본의 대베트남진출은 상당히 일찍부터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9대 주요 일본종합상사 모두가 1987년부터 이미 사무소를 개설했고 정부의 원조재개발표와 더불어 토멘, 카네마쉴, 마루베니, 니치멘, 니쇼이와이, 수미도모 등의 종합상사 등은 이미 베트남 기간산업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투자우선사업순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베트남 당국에 의하면 이미 일본상사들

10) Victor H. Frank, Jr., "Get on With It America and Recognize Vietna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4-25, 1993), p. 6.

11) William Branigin, "Criticizing Embargo, Mitterand Raises Hopes in Hanoi,"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0, 1993), p. 1, p. 7.

12) Murray Hibert and Jonathan Friedland, "Hello, Uncle Nipp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6 November, 1992), p. 64.

이 베트남내 활용가능한 수백개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끝마쳤다고 한다.¹³⁾

일본은 베트남유전 개발과 석유생산계획의 참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아라비안 석유, 테이고쿠 석유, 미쓰비시 석유, 이데미쑤 석유 개발, 이토츠 등 5대 석유시추회사들이 베트남과 계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최초의 정유시설건립에 관한 계약도 마쳤다. 일본은 이외에도 인도적 견지에서 호치민시에 있는 초라이 병원의 증축을 위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자국생산품을 유럽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이미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다.¹⁴⁾

따라서 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상, 미국정부의 무역제재조치의 연장결정은 더이상 실질적인 경제제재로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미국기업의 참여기회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베트남이 보다 개방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주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인 이해를 갖는다. 특히 동유럽과 소련공산주의의 붕괴는 베트남이 필요로하는 무역상대국의 감소를 가져왔고 연 10억불에 해당하는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중단은 베트남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베트남정부가 도이 모이(Doi Moi)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공산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무역제재조치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 우방국들의 협력을 기초로 했다. 그동안 미국정부의 압력때문에 베트남정부는 1975년 이후 수감되어온 남부베트남 출신의 정치포로들을 훈방했으며 정치체도에 있어서도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의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색채를 보이게 되었다. 사실 베트남의 개혁을 유도함에 있어서 미국과 우방국들의 협조는 거의 유일한 압력수단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등은 이미 수차례 미국의 지속적인 원조거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기구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을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요구를 더이상 좌절시킬 수 없음은 인도차이나 문제 해결에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Ibid*.

14) *Ibid*, p. 65.

넷째, 베트남의 처리문제는 미국인들에게 냉전이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베트남전은 미국이 2차대전이후 계속 유지해온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국민적 합의를 잃게 한 원인제공을 한 만큼, 새로운 합의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과거사(old legacy)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입장이다. 미국인들은 특히 냉전의 종식이후 미국적인 신념과 가치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병은 사실상 베트남전으로 인한 존슨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건설계획이 좌절된이후 만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전 이후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시작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경제적인 위축 등은 미국인이 지녀온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우월감에 대한 상처를 깊게 했으며 범죄, 마약 등 각종 사회문제와 교육의 질의 저하는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⁵⁾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이후 베트남신포를 쿠웨이트의 모래속에 묻었다고 자축하고 싶었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나 대외적인 외교적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베트남전의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과거사를 정리하고 베트남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¹⁶⁾

2. 미국의 딜레마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안게될 부담은 의외로 적지않다는데 정책적인 딜레마가 있다. 첫째, 클린턴 대통령의 전력이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금년 6월 현충일을 맞아 베트남전 추모행사에 역대 대통령중 최초로 참여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런던 옥스포드 대학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경험때문에 일부 참전용

15) George C. Herring은 베트남전은 미국에 1,670억 달러의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 이외에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믿음과 미국역사 및 미국적 가치에 혼돈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며 미국적 정서(American spirit)에 대해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America and Vietnam: Unending War." *Foreign Affairs*, Vol. 70, No. 4 (Fall, 1991), pp. 104-119.

16) Keith Richburg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전은 특정한 장소(place)로 기억되기 보다는 한 시대(era) 기억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은 적대감과 복수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베트남과의 앙금을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ack to Vietnam." *Foreign Affairs*, Vol. 70, No. 4 (Fall, 1991), pp. 111-131.

사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을 수행했던 콜린 파웰 합참의장은 자신도 베트남 전 참전용사임을 강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지만 클린턴의 베트남참전용사 추모행사의 참가에 대한 반대여론은 적지 않았다.¹⁷⁾

또한 클린턴행정부가 추진중인 국방비 삭감노력과 더불어 군내부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들은 보수주의성향의 군부 및 참전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기 충분했다. 따라서 실종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에 대한 무역제재의 해제를 클린턴의 주도로 추진할 경우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일으킬 확률이 크며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크다.

둘째, 대베트남 무역제재조치가 주는 국제적인 함의이다. 즉 베트남 국내정치의 뚜렷한 정치적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경제적인 이해때문에 미국이 갖는 유일한 압력수단을 포기할 경우 대북한 문제나 쿠바, 또는 리비아 등과 같은 여타 적성국들이나 테러리스트 국가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갖는 흥정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초기의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미국이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이들 국가들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차대전이후 성장만을 거듭했던 미국에게 경제 및 정치적 곤경과 더불어 미국정신의 위기를 안겨준 장본인인 현베트남 공산집단이 가장 원하는 바를 미국 스스로 성사시켜줄 수 없다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사실 어느 행정부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닉슨의 경우 당시 대중국 관계정상화는 외교적 승리로 간주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투르만정부의 일본이나 독일에 대한 2차대전이후의 헌신적인 지원도 미국이 승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었으며 또한 소련이라는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점에서 정통성을 의심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은 미국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준 국가였고 지금 미국이 무역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베트남경제가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미국을 적으로 싸웠던 혁명 1세대가 여전히 지배하는 베트남 공산정부에게 마지막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게 해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17) Paul F. Horvitz, "Clinton is Boosed at Vietnam Memori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1993), p. 1.

III. 미국의 예상태도와 전망

1. 예상태도

그동안 미국은 주변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즉 베트남이 좀 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고 개방된 체제로 전환하도록 외교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 프랑스 등이 더 이상 미국의 강경노선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7월 2일 양국의 대베트남 원조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미국도 프랑스, 일본과 함께 베트남에 원조를 허용하고 늦게나마 시장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미국기업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프랑스, 일본과 국제원조를 재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기업들은 보다 경쟁력을 갖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고대해 왔던 미의회 내 많은 의원들과 미기업측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베트남을 고립시키는 기존의 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베트남의 정치를 개방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실종자의 확인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반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분명히 미의회나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비록 무역제재가 해제될 경우라도 인권상황과 무역의 최혜국대우를 연계시키고자 할 것이며 실종자에 관한 완전한 해결 없이 베트남에 대한 원조재개를 반대하는 입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제재조치의 해제결정은 국내정치의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고 결국 클린턴행정부의 아킬레스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미국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미국의 기본입장에 대한 베트남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 내는 것이다. 영(Stephen B. Young)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급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⁹⁾ 즉 미국은 냉전의 종식이후 캄보디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얻어냈고 소련과 중국도 미국의 원조문제나 최혜국대우연장과 같은 이해가 걸려 있기 때

18) Richburg, *op. cit.*, p. 127.

19) Stephen B. Young, "Negotiating the Slipping Slope: Hanoi's Search for Reapproach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ai Quang Trung, ed., *Vietnam Today* (New York: Crane Russak, 1990), pp. 95-108.

문에 미국의 이해에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의 정치 및 군사적 역할 증대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도 ASEAN이나 친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입장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의 도입을 통한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적으며 친서방 선린외교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소련의 몰락이후 러시아해군의 캄란만 사용에 대한 위협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두려움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예전처럼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미국의 관심과 이해에 적응하고 변화해 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²⁰⁾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군실종자의 문제해결이후에도 베트남의 인권문제나 정치자유화문제를 향후 원조나 무역제재해제조치와 계속 연계시키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은 미국의 국내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클린턴이 주장하는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진흥전략과도 모순되며 의회내로부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모면치 못할 것이다.²¹⁾

2. 전망

미국의 입장에서 미정부 스스로 무역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신행정부가 출범한지 일천하고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럽의 보스니아 문제나 대러시아 지원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조정문제 등 모든 면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선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중동평화안의 정착문제도 클린턴의 업적으로 자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유지를 신행정부외교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미·중관계에서도 중국의 인권과 미국의 경제적인 압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대베트남정책을 통해 국면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20) *Ibid.*, p. 108.

21) Phillip D. Grub 미 조지와싱턴대 교수는 미국의 금수조치 때문에 베트남내에 미국항공기들이 곧바로 대여될 수 없는 관계로, 결국 스위스 항공의 자회사인 TEA BASEL사가 항공운항권을 확보, 미 제 보잉 737기들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정부가 하루바삐 현실감각을 회복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Hanoi Homecom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January/February, 1993), pp. 45-49, 72-73; 미국의 AT & T사는 올해초 대규모 전화 스위치 장비계약을 알카텔사와 독일 지멘스사에 내주어야 했다. "미업체 베트남대공략 차질," 『조선일보』 (1993. 10. 4), p. 13.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중국과 같은 개발독재형 공산국가를 중국국경 바로 아래 두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의도대로 인권문제나 정치개혁문제를 개선시키기를 바라는 매우 힘들 것이다.

다만 개방화는 그자체로서 문제점을 양산시킬 것이다. 베트남공산정부는 기존의 이념과 조직력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한 고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미국의 금수조치해제는 베트남정권이 필요한 기본적인 차관과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나, 경제력의 향상과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부각시켜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베트남의 정치상황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결국 베트남내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변혁이 올 때까지 미국이 원하는 개방형의 정치체제와 인권이 보장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면에서 지금보다 현저하게 발전되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베트남이 향후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그려보는 것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중국의 향후 영향력 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친미성향의 정권으로 성장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힘과 경제력을 갖춘후 다시 동남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며 패권적 성향을 보이는 국가로 변신할지를 예측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이 대중국관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친서방경향의 안정된 중견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미국이 봉쇄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 우방국가들의 협조를 끝까지 유지시켰어야만 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가 미국과 별개로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이 매년 1억달러에 상당하는 원조를 재개한다면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베트남의 입장에서 미국의 적성국분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으며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러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바에 순응하기위해 노력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국 무역제재의 해제를 전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은 현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인권상황의 개선이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지언정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다만 미국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마지막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무역제재조치를 묶어둘 경우, 실종자 가족들이나 American legion과 같은 보수단체들로부터의 비난은 모면할 것

이다.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모험을 정권 초기에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역제재를 해제시키지 않음으로써 파생하는 미국기업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외교정책의 소극성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은 현재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Road Map의 4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2단계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치들 중에 비정부조직(NGOs)들에 의한 대베트남 사업에 대한 제재의 철회와 미국회사들이 베트남내 사업진출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조치, 그리고 베트남이 국제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위해 여타 국가들이 베트남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등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제 미·베트남관계는 바야흐로 제3단계로 진입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그러나 3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전쟁 실종자에 관한 것으로 “생존자 수에 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고 반환가능한 모든 미군 유해가 송환할 것”(Resolve last known alive discrepancy cases and repatriate U.S. remains readily available to Vietna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²²⁾ 물론 그동안의 노력으로 2,264명의 실종자 중 실제 차이가 나는 사례가 불과 100명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종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 기다린다면 대베트남금수조치의 완전한 해제는 성급히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²³⁾ 미국이 제3단계의 완결조건으로 제시한 나머지 두가지 중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지원 허용은 이미 보장된 바와 다름없고 다만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미국내 베트남 연락사무소를 허용하는 문제와 무역제재의 완전한 해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외교관 3명이 하노이에 도착 현재 비공식적인 영사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멀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무역제제조치를 완전히 풀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미국정책결정자들은 시기의 선택에 매우 신중할 것이다. 미국이 무역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선언한다면 양국관계는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로 바로 이행하게되며 대사급교환과 최혜국대우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는 미국이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베트남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압력수단이라는 점때문에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분명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정치 및 경제적 이해가 있으며 미행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

22) Raymond J. Ahearn and Robert G. Sutter, "Vietnam-U.S. Normalization: Considerations for 1993,"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3, 1993), p. CRS-16.

23) "End Vietnam's Exi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9, 1993), p. 4.

제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가 신속하게 무역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베트남의 성의있는 문제해결 자세와 더불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인 미의회, 기업들, 그리고 언론이나 학계에서의 무역제재조치 해제 및 관계 정상화에 대한 끈임없는 요구는 클린턴으로 하여금 자신이 갖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정치는 여론의 향배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구원을 청산하기 위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여론의 합의가 무르익고 자신에 대한 인기가 회복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중요한 이슈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IV. 베트남의 입장: 무역제재조치의 해제가 주는 의미

비록 베트남은 30년간의 오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토통일을 달성했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에게 남은 것은 피폐한 경제환경과 가난뿐이었다. 오랜전쟁을 통하여 쌓인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고 새롭게 경제를 건설해 나아가야 할 베트남에게 시련은 끊이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는 폴 포트의 지휘아래 대살육을 감행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침공을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의 베트남전쟁'(Vietnam's Vietnam War)은 시작됐다. 중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교훈을 주기위해 베트남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했고, 일본 및 ASEAN국가들 역시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고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베트남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1975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제재조치였다. 사실 미국은 군사력을 통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경제제재를 통해 보복한다는 의혹을 갖게끔 원칙고수의 입장을 지켰으며 실제로 베트남이 긴 경제공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으로서는 사실상 8년간의 미국과의 전쟁기간보다 더욱 힘든 고통을 맞보아야 했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조치가 해제된다면 베트남은 1975년 이후 계속된 미국과의 길고 지루한 대결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인당 평균소득 2백달러의 가난한 경제로부터 「아시아의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베트남정부의 노력이 아무런 외부적인 방해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베트남 공산정부는 자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1986년 이후 도이모이정책을 표방해 왔지만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라는 큰 부담속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외자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주요 국가들의 대베트남 지원노력조차 미국의 압력으로 번번히 차단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그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1986년 개혁초기 연평균 3% 정도에서 1991년에는 약 10% 정도의 성장세로 전환했다. 특히 1992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계획의 모든 목표들을 달성했다. 국민소득(GDP)이 8.3%로 성장했으며 공업생산은 15%로 증가했다. 특히 농업은 1986년 당시 거의 기아상태에서 출발, 쌀생산량의 경우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1992년 농업생산량은 전년대비 4.4%나 증가했다. 특히 식량생산은 9%로 증가하여 2천 4백만톤의 식량생산 중 2백만톤의 식량을 수출할 수 있었다. 수출 역시 73%로 증가했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인플레이션율도 감소시키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즉 1986년에 776%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율을 1991년에는 70%로 낮추었고 1992년에는 약 15%로까지 낮출 수 있었다.

1993년도에도 베트남의 성장은 지속되었으며 1·4분기 공업생산이 전년대비 약 11.5% 성장했고 석유생산은 18%, 시멘트 생산은 20%, 비료생산은 23%씩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은 베트남의 나쁜 기상조건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금년도에도 약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4분기 수출 또한 전년대비 16% 정도의 성장으로 그 액수는 약 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 약 2/3는 1백 5십만톤의 원유수출(전년대비 18%증가)과 47만톤의 쌀수출(전년대비 두배)에 힘입은 바 크다.²⁴⁾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1·4분기에만 61%가 증가했다. 1993년 4월초까지 하노이 당국은 626건에 5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승인했다. 소비자가격 역시 1993년 들어 처음 4달 동안 약 2.7% 정도 상승했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1993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을 15%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외환보유사정도 개선되어 현재 약 4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²⁵⁾

물론 베트남경제에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청년실업의 증가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유리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3년도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계속 안정화되고 국민생활도 향상되고, 더 많은 우방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135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에 의한 투자가 급격히 증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베트남의 정부책임자들은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해제를 목표로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²⁶⁾ 미국의 요구에 따라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단행했고 중국과의 관계정상

24) Murray Hibert, "Better Tim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7 May, 1993), p. 59.

25) *Ibid*

26) Mike Young은 베트남 외교의 3대기조로 독립외교, 선린외교, 안보외교를 들고 있으며, 그 중 선린외교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한

화를 추진했으며 ASEAN과의 친선 및 우호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베트남의 키에트 수상은 일본 및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외교를 폈으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하노이로 초청하여 베트남과 프랑스와의 국교를 정상화 했다. 이후 베트남은 벨기에의 부총리 및 외무장관, 독일의 외무장관, 네덜란드의 왕자를 초대했고 보 반 키에트 수상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공동체 및 영국을 방문하여 다변적인 외교를 통해 많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발전원조기금의 재개를 얻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베트남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강화에도 노력했다. 키에트 수상은 쿠바를 방문했고 전통적인 비동맹국가인 인도와도 무역 및 경제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구소련연방 공화국들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했다. 베트남-러시아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에도 대사관을 개설했고, 르마이 외무차관으로 하여금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를 순방하게 하였다.²⁷⁾ 구엔 만 캄 외무장관은 이란을 방문하여 경제 및 과학협정을 체결하고 농업 및 유전 개발에 대한 양국간의 협조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베트남은 대유엔외교 및 비정부간 기구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1993년 5월 부르르 트로-갈리 현 유엔 사무총장을 하노이로 초청하기도 했다.²⁸⁾

이러한 베트남의 총체적인 외교의 목적은 전세계국가들과의 선린외교를 통해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경제적인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의 연장이 더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음을 과시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77년 당시 카터 대통령의 대 베트남 관계개선을 위한 제의에 대해 미국의 실종자에 대한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30억 달러의 전쟁보상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더욱 멀게한 사실도 있다.²⁹⁾ 그외에도 베트남 정권 내부에서 레 푹 토 중심의 파벌이 응웬 코 탁 외무장관의 대미친선노선에 제동을 걸고 실종자(MIA)이슈에 대한 양보를 허용치 않던 시절도 있었다.³⁰⁾

그러나 팜 돈 남(Pham Doan Nam)이 『탑치콩산』(Tap Chi Cong San) 1988년 2월호에 실린 기고를 통해 외교정책에서의 새로운 사고전환을 요구한 이래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자

다. "New Thinking in Vietnamese Foreig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3 (December, 1992), p. 263.

27) Press Release b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ermanent Mission to the U.N. No. 17 (June 25, 1993), p. 1.

28) *Ibid.*, p. 2.

29) 미국과 베트남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역사적인 분석은 홍규덕,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991년 가을, 겨울호), pp. 181-203.

30) Thai Qung Trung, *Vietnam Today* (New York: Crane & Russak, 1990), p. 18.

세도 한층 협조적이 되었다.³¹⁾ 최근에는 베트남내 문서고에 대한 미국조사위원들의 사찰을 허용하였고 30만장에 가까운 문서들을 제공하였으며 최초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군전사자 유해에 관해 정부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미국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미 상원청문회 위원장인 존 케리 의원 및 베트남에서 장기간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 국민적 영웅이 된 존 스톡데일 제독이나 존 매케인 상원위원 등으로부터 베트남이 더 이상 포로에 대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생존포로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케리 상원위원은 베트남정부가 미국정부의 수색작업에 대한 총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하노이를 수차 방문한 존 베시 전합참의장도 소련문서고에서 발견된 베트남정부의 일급 비밀자료에서 하노이 당국이 1972년 당시 미정부에 통보한 숫자보다 많은 837명의 포로를 억류하고 있었다는 4월 12일자 미국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그 진위를 확인한 바,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증언했다. 베트남정부 역시 문서의 서명자인 당시 육군 참모차장 트란 반 쩡(Tran Van Quang) 장군의 증언을 통해 문서가 가짜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³²⁾

이제 베트남정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원조가 재개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제재조치가 더 이상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불들어 매는 울가미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정부는 사실상 모든 경제적인 곤경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베트남정부의 능력에 의해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켰고 가격통제를 통해 동구 어느 공산국가보다도 개혁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조절기능이나 이자율에 의한 통제만으로 중앙통제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베트남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³³⁾ 베트남은 여전히 개혁 이전의 정치문화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경제개혁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정치국원 뜨란 쉐안 박(Tran Xuan Bach)과 같은 인물이 당시 당서기장이던 응웬 반 린에 의해 강등, 숙청당한 사례가 베트남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간의 불일치현상은 언제라도 개혁에 대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31) *Ibid*.

32) Susumu Awanohara, "Ghosts at the Fea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April, 1993), p. 72.; Awanohara and Hibert, "New MIA Row Dogs Hanoi,"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9 April, 1993), p. 12.

33) Per Ronnas and Orjan Sjoberg, "Economic Reform in Vietnam: Dismantling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7, No. 1, pp. 7-19.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베트남 지도부는 정치개혁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개혁이 안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개혁을 감시하고 주도할 독립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개인의 사유권과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³⁴⁾ 이러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일부 특권층이나 관료계급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계기가 되기 쉬우며 점차 벌어지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소득차이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퇴색시킬 것이다. 또한 번창하는 범죄와 마약, 그리고 매춘은 베트남사회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마저 흔들어 놓기 쉬운 것이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베트남 스스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1992년 베트남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80년 헌법의 개정문제였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경제개혁에는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정치개혁에는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과 당의 지도노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7월 19일 선거를 통해 395명의 의원을 선출했지만 32명의 독립후보중 당선가능한 2명이 모두 패배하는 등 선거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만한 소지는 전혀없었을 뿐 아니라, 9월 19일부터 10월 8일간 열린 첫의회 소집 이후 발표된 새로운 조각내용에서도 19명의 관료 중 2명만이 교체되는 등 전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³⁵⁾

현재 베트남 공산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실업인구가 급증하는 문제와 청년층 중에서 당적을 갖지 않는 추세를 지적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실업인구 3백 5십만 중 약 70%가 현재 청년층이며 5백만 지방실업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다. 반면 이들 중 1987년 당적 보유자가 10만 명에 달하던 것이 1991년에는 3만 6천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³⁶⁾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당은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인기하락과 청년당원의 감소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치국원겸 전망시스트레닌니스트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이론가인 응웬 푹 빈과 군정치국장 출신 보수주의자인 레 까 피우를 당서기로 임명하였다.³⁷⁾

그러나 1986년 개혁정책의 시작과 더불어 당에 대한 외부비판이 증가하면서 당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으며 당지도부가 사회악과의 투쟁을 선언했지만 베트남내 자본주의의 병균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만연될 조짐이다.

34) Murray Hiebert, "Miles to Go,"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9 July, 1993), pp. 24-25.

35) Dorothy R. Avery, "Vietnam in 1992: Win Some; Lose Some," *Asian Survey*, Vol. XXXIII, No. 1 (January, 1993), pp. 67-74.

36) *Far Eastern Economic Review* (4 February, 1993), p. 27.

37) Avery, *op. cit.*

따라서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베트남무역제재조치의 해제가 미치는 영향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당의 정통성을 확대시킨다는 낙관적인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첫째, 베트남관리들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행정적인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셋째, 원시적인 은행관리체제가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의 미비가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너무나 많이 통용되는 급행료와 부동산의 부족, 그리고 높은 임대료 등은 이미 악명이 나있고 약 5만에 달하는 매춘인구와 약 3만 명으로 추산하는 상습 마약 복용자, 그리고 AIDS의 급증은 해외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통제력 부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³⁸⁾

베트남인들은 흔히 미국의 대베트남금수조치만 해제되면 40년에 걸쳐 쩌들어 왔던 베트남의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 질 것처럼 판단하고 있지만 무역제재조치의 해제는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물론 더많은 외국자본의 투자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베트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없는 경제개혁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관리경험이 없는 현 정부의 조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각종 부패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빈부격차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V. 결론: 한국의 대응책

한국은 베트남과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양국간의 투자와 교역 등 경제교류는 1992년 12월 22일 양국간의 국교정상화 이후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중단되었던 대베트남 교역은 1983년 부터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를 통해 재개되었다. 이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1988년부터 직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 교역규모가 매년 급증하면서 베트남은 중국, 독립국가연합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사회주의권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한·베트남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1983년 2천 3백만 달러에서 1990년 1억 5천만 달러, 1991년 2억 4천만 달러, 1992년에는 약 4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일로에 있다.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1992년말까지 약 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수출품목

38) "The Saigon Miracle," *Newsweek* (April 5, 1993), p. 18.

은 임가공진출에 따른 섬유직물, 섬유기계, 비료, 철강, 합성수지 등 현지경제개발에 필요한 품목, 전자교환기 등 산업용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수입은 무연탄, 농수산물, 주식, 목재 등 1차산품 위주이고 최근들어서는 베트남의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섬유, 봉제부분에서 임가공 진출형태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³⁹⁾ 대베트남 투자가 공식허가 되기 시작한 1992년 1월 이후 1992년 말까지 약 18건에 2억 2천 5백만 달러의 현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대베트남 투자국 중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 업종은 제조업들이고 운수보관업과 호텔업 등도 있다.⁴⁰⁾

1993년에 들어서면서 한국기업의 대베트남진출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1·4분기에만도 10개 프로젝트에 1억 9천 57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간내 투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⁴¹⁾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의 대베트남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투자환경의 개선에 따라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의 확대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이 TV조립공장, 합성공장, 현대가 자동차부품공장, 섬유, 신발공장 등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대우, 기아, 쌍용 등 나머지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베트남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베트남 최대자동차인 VMC와 6월 조립공장을 완공했고 프라이드, 베스타 등 약 3천대분의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1년 6월 처음으로 베트남시장에 진출, 코란도 헤밀리 부품을 91년에 160대분을 지난해 5백 50대분을 수출했는데 올해에도 5백대분을 수출할 계획이다. 쌍용은 그간 베트남에 대한 단순부품수출에서 전환, 부품조립기술의 이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우자동차 역시 약 2만 대 내지 3만대 생산규모의 현지공장을 세워 현지 판매와 외부수출을 겸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⁴²⁾

이밖에도 유개공 등 8개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움이 베트남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해상 석유탐사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빅베어(大熊)유전개발 등 자원개발분야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3년 5월 13일 보 반 키에트 베트남 총리가 베트남의 주력산업계 대표 25명과 다오 녹 수언 국가협력 투자위원회 위원장과 두안 뒤탄 베트남 상의회장 등 정

39) 『동아일보』 (1992. 12. 19), p. 8.

40) 옹웬 푸 빈 주한 베트남대사, 한국인간개발원주최 조찬 연설 "베트남의 현황과 베트남-한국 협력 관계증진을 위한 기본과제" (1993. 5. 21), p. 4.

41) *Ibid*

42) 『조선일보』 (1993. 5. 17), p. 9.

부경제각료 25명 등 약 5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항공협정을 체결했으며 자원개발, 시멘트공장 건설, 비료공장건설 등 총 10억달러 규모의 합작프로젝트에 한국측의 참여를 요청해왔다.⁴³⁾ 국내기업들은 현재 키에트 수상의 방한과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대대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포철은 이미 철강가공공장 등을 설립했으며 럭키금성은 베트남 53개성 중 37개성에 전화교환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현지통신망구축사업에 성공을 거두었고 비료, 시멘트, 가전제품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한진그룹과 대우, 현대 등도 항만건설사업 및 도로공사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⁴⁴⁾

이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용자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베트남정부는 취약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한국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단계상 베트남과 한국경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 즉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발경험과 결부될 때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노동집약적 경공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노동력 개발에 도움을 얻을 것이며 기술이전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여건이 반드시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지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양국은 적대국으로서 한 때 총부리를 겨누고 전투에 임했던 불행했던 과거가 있다. 비록 수교과정에서나 그 후 여러 협정체결과정에서도 베트남정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나 베트남 관련기업들은 지난날 양국간에 존재했던 앙금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 혼혈2세들과 베트남인들을 돕기위한 움직임이 양국정부 및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결실을 맺게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 베트남거주 한국인 혼혈 2세들과 베트남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앞선해주기 위한 베트남 직업훈련센터가 1993년 4월 설립된 이후 지난 8월 호치민시에 문을 열었으며 약 7천에서 1만 5천으로 추산되는 라이파이한들이 앞으로 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 봉제, 냉장냉동,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운전, 중장비정비, 중장비운전, 배관, 용접, 전기, 목공, 자동차 정비 등 12개과목의 기

43) 『한국일보』 (1993. 5. 14), p. 9.

44) *Ibid*

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약 3만 3천명의 부지를 제공했으며 한국정부는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25명을 초청 약 3개월간 연수시킨 바 있다.⁴⁵⁾ 이러한 직업훈련원이 정착되면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이미지도 좋아질 뿐더러 현지공장에서의 인력충원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미지 관리와 관련, 한국기업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지난 2월 발생한 작업거부사태이다. 약 6백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베트남 합작회사인 Reeyoung Co, Ltd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봉급수준, 그리고 한국인 간부들의 폭언과 손지침에 항의하는 쟁의가 발생한 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과격한 시위는 아니었지만 사이공 함락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회사측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에게 베트남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인 월 35달러의 기본급을 주기로 약속했고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가했다. 또한 근무외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은 노조간부들과 사전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국인 간부들의 구타행위도 근절시키기로 합의했다.⁴⁶⁾

현재 호치민시거주 외국인 투자회사 252개 중 약 20%만이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고 39개의 회사만이 노조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기업만이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정부에서도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고 또한 금년 12월에 열릴 예정인 국회에서 일반 노동자에 한해 쟁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초안이 작성중이라는 사실은⁴⁷⁾ 우리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물론 외국인 투자의 감소를 우려하는 베트남 정부측에서는 아직 이러한 국회의 결의안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문제가 베트남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경우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자극함으로써 양국관계에 적지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경제교류에서는 경제적 이익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임금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출위주의 접근보다는 내수시장확보를 목표로 보다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⁴⁸⁾ 이미 지적했듯이 양국간의 특수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정신에 입각한 신뢰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교류에 의존하기보다는 양국간의 학술교류나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한국의

45) 한국측은 베트남과의 협의하에 훈련원으로 사용할 베트남내 토지와 건물을 10년간 무상으로 쓰는 대신 한국측은 10년간 24억원을 투입, 베트남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조선일보』 (1993. 6. 9), P. 9.

46) Murray Hiebert, "Industrial Disease: Strikes on the rise at foreign-owned factori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 September, 1993), pp. 16-17.

47) *Ibid*.

48) 김윤광, "한 베트남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북방저널』, pp. 21-26.

이미지를 새롭게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의 관제개선 추이에 따라 한국이 갖는 선점의 이점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미국과의 합작투자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 기관들의 용자를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⁴⁹⁾ 한국내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기업들간의 조정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측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으로는 대중국투자와 통일에 대비한 대북한 투자와의 우선순위의 조정이 문제가 될 것이나 한국경제에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대유류수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에 대한 진출은 매우 적극성을 갖되 세심한 준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9)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들은 교량, 병원, 수력발전소, 공업단지조성, 항만, 종이공장, 제련소, 상수도보급과 경제개발프로그램,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보건의료 시설재건, 이차교육시설 확충, 관개시설 보수, 전기공급체계의 현대화 등이다. Murray Hibert and Susumu Awanohara, "Ready to Help,"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April, 1993), p. 74.